

2021년 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음부즈맨

○ 편성시간

기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25~00:55)
변경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1/03	<뉴스오늘>,<뉴스1번지>,<일요와이드>	
김홍태	1/10	<뉴스10>,<뉴스15>,<토요와이드>	
이재원	1/17	<토요와이드>,<일요와이드>,<뉴스오늘>	
김창숙	1/24	<뉴스워치>,<뉴스1번지>,<뉴스메이커>	
안호림	1/31	<뉴스워치>,<뉴스리뷰>,<토요와이드>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해촉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임기만료
선임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0. 12. 18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 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1 1/3(일)	김창숙	12월 24일 <뉴스워치>에서는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은 물론, 생산도 줄이는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고, 슈퍼마켓과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이와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할 방침인데,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스워치>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부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는데, 앞으로 음료나 생수를 담은 용기를 유리나 캔 재질로 바꾸는 등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을 점차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에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도 평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신설되며, 현재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병 사용 제품까지 확대하고,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적용하는 등 재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이 증가	

		하면서 폐플라스틱과 페비닐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인 사안인 만큼 단순히 정부대책을 전달하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획보도나 심층보도같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1/10(일)	김홍태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지표와 관련하여 시가총액 증가율, 코스피지수, 무역수지 등을 보도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도 함께 보도하였는데요, 지난해 12월의 지수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G20 가운데 중국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말보다 18% 정도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코스피 지수가 11% 상승하며 22년 만에 즉,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규모가 모두 감소했지만, 12월 수출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역대급 실적이라며 내년은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작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분석하며 나름 짧	

		<p>지만 임팩트있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는 위 어떠한 수치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작년 12월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경기 체감지수는 51.6으로 전월보다 28.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체감지수가 증시의 시총이나 코스피지수 그리고 무역수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일반적인 설명 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표의 차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작년 우리나라 경제지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시청자들이 앞으로 경제흐름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p>	
2021 1/17(일)	이재원	<p>지난주 연합뉴스TV는 10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일요와이드]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조목조목 정리해주었습니다. 여권과 야권 각각 나눠 보도하며 서울시장을 미리 전망했습니다.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별 정치인의 면면에 집중해 경쟁구도로만 보도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보통 선거 보도가 경마식으로 뉴스를 전하</p>	

		<p>는 관행이 있지만, 정치인 각자의 사연보다는 평소의 정치철학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해 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정치인이 서울시와 관련해 내놓았던 과거의 발언만 정리해줘도 좋겠습니다.</p>	
2021 1/24(일)	김창숙	<p>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방향적인 연설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문답형식이라 대통령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오랜만에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서두에서 문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쌓여있는 현안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이슈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기자회견 후 많은 질의응답 내용을 연합뉴스TV가 주요 이슈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과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적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문제, 4차 재난 지원금 문제, 교육격차 문제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p>	

		결된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지 못했는데, 시청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31(일)	안호림	연합뉴스TV에서는 1월 17일 일요일과 이드, 1월 20일 뉴스큐브, 1월 21일 여의도 1번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갖는 중요성,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우리나라의 독자적 정책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같이 기사를 내보내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3차례에 걸쳐 내보내며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은 돋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당당한 주체입니다. 2년 전 북미회담의 성사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했었고, 2018년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9.19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맞춘 기	

		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1.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작년 12월 24일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장을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여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가운데 윤 총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어 1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판결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뉴스오늘>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재판부가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졌는데,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 대해

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방해 의혹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다루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위원 3명의 의결로 처리를 했는데 과반 정족수인 4명을 지키지 않아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편향성, 명단 사전 비공개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25일 <뉴스1번지>에서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민주당은 성탄절 오전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으로 이낙연 대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부 최고위원과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풀어가자고 뜻을 모으고 당내 기구인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구성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개혁 TF는 그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면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2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 1월 중으로 공수처를 본격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민의 힘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여권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 체계,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으며 잘못된 줄 알았으면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를 정조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일종의 법률을 두고 다툰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원초적인 관심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이에 편승하여 승자와 패자를 부각시키며 당사자들의 반응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니 하는 표현으로 여야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초유의 사태를 둘러싼 법조계의 법리 다툼만큼 법원판결의 내용과 논리, 시사점 등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주는 해설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뉴스10>에서는 연말 늘어난 택배 배송을 하다 40대 택배기사 또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과로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 기사가 쓰러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진택배 소속 40대 김 모 씨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배송품을 나르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연말을 맞아 택배 물량이 늘면서 김 씨가 하루에 배송해야 했던 물량은 약 300개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7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정부와 택배 업체들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코로나19로 불어난 물량 탓에 분류 작업에 대한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로 이어졌고, 택배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1월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분류 인원 총원 등에 대한 업체 측 부담을 명시하지 않아 발표 직후부터 반쪽 짜리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롯데택배 소속 34살 박모씨는 사망 일주일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300건 이상 격투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롯데택배가 1천 명의 분류 인력 투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 터미널에는 단 한 명의 분류 인력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업체 측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수많은 택배 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관련 보도가 잇을만 하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관련업체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약속들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건이 터지면 매번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책이 발표되면, 관련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나 관련업체가 대책마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만큼 적절한 대책인지 등을 언론이 중간중간 체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나 관련업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일텐데, 언론의 조명해주지 않는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비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노동현장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4일 <뉴스위치>에서는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은 물론, 생산도 줄이는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고, 슈퍼마켓과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소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이와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 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할 방침인데,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스위치>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부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는데, 앞으로 음료나 생수를 담은 용기를 유리나 캔 재질로 바꾸는 등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을 점차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에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도 평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신설되며, 현재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병 사용 제품까지 확대하고,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적용하는 등 재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인 사안인 만큼 단순히 정부대책을 전달하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획보도나 심층보도 같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1. 01.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지표와 관련하여 시가총액 증가율, 코스피지수, 무역수지 등을 보도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도 함께 보도하였는데요, 지난해 12월의 지수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온라인 공연 등으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는 소식과 온라인 수업 등에 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관한 보도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일 뉴스13에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9개월 만에 최악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1차 유행 당시인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는 51.6으로 전월보다 28.3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관련 업종이 29.5로 전월보다 42.8포인트 내렸고, 개인서비스업 41.4포인트, 음식점업도 31.5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체감경기가 악화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유행을 꼽은 응답이 89.2%로 가장 많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뉴스15에서는 지난해 12월 코스피 지수가 11% 상승하며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코스피는 2,873.47로 11월 말 대비 10.9%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998년 24.5% 이후 가장 높은 12월 월간 상승률로, 특히 개인은 12월 한 달간 3조6,508억원을 순매수하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뉴스10에서는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블룸버그가 지난해 한국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 기준 주요 86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총 102조9천550억달러로 2019년 말보다 18.4%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총은 2조982억달러, 약 3천239조9천여 억원으로 45.6% 늘었는데, 한국 증시의 시총 증가율은 86개국 중 여섯 번째이며, 특히 G20 국가들 가운데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작년 수출이 5.4% 감소했으나, 막판 반등에 올해 회복을 기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과 수입규모가 모두 감소했으나, 다행인 점은 12월 수출은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변수는 있지만 상승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G20 가운데 중국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말보다 18% 정도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코스피 지수가 11% 상승하며 22년 만에 즉,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규모가 모두 감소했지만, 12월 수출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역대급 실적이라며 내년은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작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분석하며 나름 짧지만 임팩트있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는 위 어떠한 수치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작년 12월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경기 체감지수는 51.6으로 전월보다 28.3포인트나 급락했습니

다. 이러한 체감지수가 증시의 시총이나 코스피지수 그리고 무역수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일반적인 설명 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표의 차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작년 우리나라 경제지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시청자들이 앞으로 경제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새해 첫 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체감지수가 현실 경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뉴스03에서는, 지난 해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 앞에 문화계는 지난해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분야를 막론하고 일정 연기와 취소가 잇따랐고, 화려한 행사 대신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뤄졌지만,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해 6월 열린 방탄소년단의 첫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는 동시 접속자 수만 최대 75만여 명에 달해 기네스 기록에 올랐는데요, 현장 공연의 감동을 대신하진 못해도 저렴한 비용으로 생생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이 장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뮤지컬계에서도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료 온라인 공연이 안방을 찾았는데요, 최근에는 '킬러파티'와 같은 웹 뮤지컬도 등장하면서 뮤지컬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 연극계에선 스테디셀러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가 영화로 재탄생하는 등 공연 영상화 작업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한 국·공립 문화 시설들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나섰는데요, 코로나 우울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로 색다른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으며, 위기 속에서도 소통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노력이 문화산업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오전 토요일이드에서는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들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신년을 맞아 희망을 기원하는 작품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공통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해묵은 갈등을 안고 떠나는 쥐와 용맹한 기세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황소. 새해 소망을 한 컷에 표현한 재치있는 글과 그림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국만화 박물관이 소띠 해를 맞아 마련한 카툰전 '근면성실하소'입니다. 소를 소재로 한 한국카툰협회 작가들의 작품 40점을 선보이며,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현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1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8m 크기의, 두 팔을 벌리고 시민들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의 꿈은 밤이 되면 핑크빛으로 일대를 밝히며 따뜻한 느낌을 더하는데요, 서울시 '핑크라이트 캠페인'에 맞춰, 핑크색으로 코로나 극복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했으며, 대규모 설치미술 프로젝트 '허그 베어-베어브릭'의 세 번째 시리즈로, 소중한 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의 관광 명소인 용두산 공원에는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대형 달 토끼가 등장했는데요, 스위치를 올리면 거대한 달과 토끼에 불이 켜지면서 특별한 포토존이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일까지는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여서 온라인으로 마련한 퍼포먼스 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계는 지난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분야 중 하나인데요, 행사 취소가 잇따랐고,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나 유료 온라인 뮤지컬 공연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짧은 분량의 '웹뮤지컬' 등 온라인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현 상황에서 문화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이를 위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뮤지컬이나 콘서트 온라인 공연의 경우에 어느정도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음 좋았을 것입니다. 문화업계의 생존도 코로나19에서 중요한 화두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일 토요일이드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2, 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며, 전국 지자체에서 무상 급식도 대폭 확대되고,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30만원씩 입학 준비금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급여 지원도 확대되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24%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는 올해 큰 과제로 꼽히며,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면 시행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비교원이나 교원자격소지자 등 보조인력을 학습도우미로 활용하는 '1수업 2교사제'를 전국 1천여개 학교에 확대 적용해 교육 안전망을 넓히게 되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인공 지능도 도입되어, 관련 교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 과목이 신설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등인데요, 일부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은 제외된다고 하며, 교육활동지원비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이 정규 수업으로 제도화됐는데요, 시청자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대면수업을 대체가능한지 여부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도농간 격차 뿐만 아니라 개인간 격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는 한번쯤 짚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반 친구들과조차 전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추후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1. 01. 1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태원 자영업자의 대책 요구와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목소리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일명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문제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을 이태원 상권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9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위험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줄폐업에 이르렀으며, 형평성 있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강원래 홍석천 등 방송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강원래는 이태원 대부분 가게가 저녁 시간 이후 손님들이 찾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업종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정책이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홍석천 역시 더 이상은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이미 폐업을 결

정한 식당들이 집기를 밖으로 던지며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자영업자들이 이태원 상권이 몰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가게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한 현장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여과없이 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10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상호 의원이 유일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안에 결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도는 박 장관이 이달 개각 이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만약 불출마로 굳힌다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이상호, 박영선 양자 대결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일요와이드]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전까지 안 대표에게 입당이나 양당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대표는 야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자신이 국민의힘 주도 단일화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실패로 스스로 물러나며 박원순 서울시장 탄생에 단초가 됐고, 안 대표는 이른바 '안철수 바람'을 몰아주며 밀거름 역할을 했다며 박원순 시장 탄생에 얽힌 두 주자로 두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일요와이드]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조목조목 정리해주었습니다. 여권과 야권 각각 나눠 보도하며 서울시장을 미리 전망했습니다.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별 정치인의 면면에 집중해 경쟁구도로만 보도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보통 선거 보도가 경마식으로 뉴스를 전하는 관행이 있지만, 정치인 각자의 사연보다는 평소의 정치철학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해 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정치인이 서울시와 관련해 내놓았던 과거의 발언만 정리해줘도 좋겠습니다. 11일 [뉴스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 방안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포용성 강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각오가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올해 신년사의 내용을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강국을 향한 선도국가 도약의 청사진, 취약 계층을 향한 '포

용성 강화' 메시지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통합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까지 신년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외에도 혁신적 주택 공급 대책,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오전 10시 신년사 중계 이후 오후 [뉴스워치]를 통해 신년사의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경제'가 29번, '코로나'가 16번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 방안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도 11번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년사 내용이 경제 분야에 집중되면서 지난해까지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들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4차례나 등장한 '공정'은 올해는 5번으로 줄었고, '평화'도 크게 줄어 6번 거론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키워드와 횟수를 그래프로 함께 제시해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언급 키워드를 비교한 점, '비핵화'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 등 담기지 않은 키워드도 분석해 대통령 연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8일 [뉴스투나잇]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출동하는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피해 아동·신고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국회가 움직이긴 했지만, 아동학대 관련 수많은 법안을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땀질 대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법안이 잘 지켜지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만 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뤄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추적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10일 [일요와이드]와 11일 [뉴스리뷰] 등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재판 앞두고 검찰이 엄마 장모씨에게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꿀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 결과의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인의 사망원인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봐 고의성이 있다면, 즉 정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확대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8일 서울 강북구에선 겉옷도 입지 않은 만 4세 여아가 길을 헤매다 시민에게 발견되는 사건, 10일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의 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엄마를 입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대되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부모',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친모' 등 입양 여부를 구분 짓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양부모인지 친부모인지는 정보의 하나일 수 있지만, 자칫 입양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1. 2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방향적인 연설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문답형식이라 대통령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부동산 문제, 백신 접종 계획 등에 관한 언급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1월 18일 <뉴스워치>에서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다루었는데, 문 대통령은 깊은 고민 끝에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세가 많아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점, 국가적 폐해와 국민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에서 무거운 형벌을 막 선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로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아픔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건은 충분히 경찰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하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핵심은 역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도심 고밀개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늘리거나, 도심에 있는 공장을 옮겨 남는 땅에 집을 짓는 방식 등인데, 이 과정에서 공공이 개발에 참여해 신속한 사업을 유도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해 전세수요에도 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도 언급했는데,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끌어다 쓴 상황에서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사과하며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며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에 미리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는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며 올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시사했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며 발생한 현상이지만 개인 간 감정싸움으로 비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북미대화, 한일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회견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의 남측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여러모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며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나 평화 구축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올해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키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오랜만에 직접 들어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서두에서 문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쌓여있는 현안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이슈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기자회견 후 많은 질의응답 내용을 연합뉴스TV가 주요 이슈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과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적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문제, 4차 재난 지원금 문제, 교육격차 문제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지 못했는데, 시청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8일 <뉴스1번지>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돋보인 기자회견이었다며, 특히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가 화두를 던진 사면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도 소통도 찾기 힘든 회견이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던 박근혜 정부와 회견 횡수에 차이가 없고, 회견 대신했다던 현장 방문은 권위주의시절 보여주기 행정으로 많이 쓰이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 효과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는 세계 성장 전망보다 크게 뒤질 거라고 지적하였고, 대통령 직함의 통 자는 통술이 아닌 통합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특히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을 집중 질타했는데,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이나 추미애-윤석열 갈등, 중대재해법 등 몇몇 현안의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두루뭉술한 화법과 원론적인 답변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단초가 됐던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는데, 파양 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공허한 120분'이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답변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날선 비판을 했고,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지만 취지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검토 중으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전위탁보호제도에 관한 것일 뿐 파장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보도 내용을 보면, 회견 당일이라 정치권 반응과 논란이 됐던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언론은 논의를 보다 확장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향후 전망들을 도출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전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중복된 질문이 많았고,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질문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질문 구성이나 진행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1. 01. 3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자 빗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빗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 적정가격 형성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4월 재보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연합뉴스TV에서는 주가3,000선 돌파와 공매도 관련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뉴스워치> 그래픽 뉴스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논란이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의 순기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했고,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시행될 때 시장조성자


로 분류된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공매도한 거래 금액은 모두 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뉴스리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공매도 금지연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매도 연장을 둘러싼 여야 정치의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는 3월 중순 재개될 예정인 공매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불을 붙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전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서 갚는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양향자 의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면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려 신중한 검토라는 여당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공매도 재개 여부는 증권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정치권은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12일 뉴스워치 그래픽 뉴스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 하루 뒤인 13일 뉴스리뷰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13일 방송된 뉴스리뷰는 공매도 제도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전후 맥락이 없어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방송된 그래픽 뉴스처럼 공매도 재개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4월 재보궐 선거에 공매도 재개가 어떤 맥락으로 닿는지, 여야의 입장 차이 등에 대해 다뤘다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1월 11일 <뉴스20>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상반된 투자경향을 대비시키며 코스피 등락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증시의 과열 조짐 위험성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빗투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11일 하루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 추이를 상세하고 보도했습니다. 4조 4천억원에 달하는 동학개미들의 투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추세를 받아내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후반부에서는 빛투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장중 최고 지수를 기록했지만 하락종목이 상승종목 보다 4배나 많았으며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발언과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외국인과 기관만 가능한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도 조정 요인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1월 8일 <뉴스리뷰>에서는 이를 연속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주식 시장 상승추이를 주목할 만한 종목의 상승세와 최근 코스피의 추세 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상승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실물경제 회복 없는 주가 상승은 조정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고, 결국 큰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2,800선 전후로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본인의 여력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기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물경제와 괴리된 주가 상승 국면이 조정국면을 맞아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례를 1~2개 인용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학개미 현상에서 보이듯이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전문가들의 조언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기사가 되려면 실제 사례를 인용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로 북핵문제 보도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우리에게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할 것인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3일 오전 8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미국의 외교 안보라인의 면면과, 정부의 바이든 시대에 대한 대응, 북한의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크게 다를 것임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상세하게 소개했는데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특징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잘 아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기자는 미국, 한국, 북한 중 한 국가 뉴스에 치중하던 어느 기사들과는 달리, 앞으로의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북한과 한국의 외교담당자들에 대한 소개, 각국의 입장과 상황까지 설명했습니다. 1월 23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백악관 “북핵 심각한 위협…새로운 전략 첫 언급”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켄 사키의 백악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까 걱정되었던 북핵문제를 바이든 행정부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철저한 정책 검토를 통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예고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보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철저한 정책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관련 우선업무로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일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데도 선을 그어온 만큼 철저한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바이든식 대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기사는 주제의 중요성에 맞게 긴 시간을 들여 자세히 분석한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라인에 어떠한 인물들이 포진되었나를 중심으로 한 상세한 분석이 돋보입니다. 나아가 다른 기사들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한국의 태도와 상황을 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입체적으로 북핵문제를 조망한 점이 돋보입니다. 1월 21일 <뉴스20>에서 문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약 2년 만에 주재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보도입니다.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한반도의 봄’ 중심에 섰던 정의용-서훈 ‘투톱 체제’ 부활과 정통 ‘북미라인’인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발탁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직접 만나길 기원하고 SNS에서도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미 교섭 경험이 풍부한 인사에 북미 가교 역할을 맡기며 한반도 평화 시계 전진을 바이든 행

정부의 상위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1월 17일 일요일이드, 1월 20일 뉴스큐브, 1월 21일 여의도 1번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갖는 중요성,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우리나라의 독자적 정책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기사를 내보내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3차례에 걸쳐 내보내며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은 돋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당당한 주체입니다. 2년 전 북미회담의 성사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했었고, 2018년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9.19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1년 1월 03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1년 1월 10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1년 1월 17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1년 1월 24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1년 1월 31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